코로나 실업·파산·폐업 속출…빈곤 내몰리는 취약계층

광주 기초생활수급자 3년새 25% 급증…전남은 2년새 7800여명 늘어

코로나 3년째 위기가구 힘겨운 생계…위기 극복 위한 촘촘한 지원 절실

3년 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침체, 실업 등으로 인한 폐업과 파산도 해마다 늘어나는 형국이다. 생계를 힘겹게 이어가는 위기가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대면 복지 서비스도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지역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과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 급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50% 이하 저소득층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만 1548명으로, 지난 2018년 수급자(7만 2757명)에 비해 1만8791명 늘었다. 3년 간 무려 25%나 증가했다. 2018년만 해도 7만 2757명 수준이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9년 7만 6193명으로 늘더니 2020년 8만4762명, 2021년 9만 1548명까지 크게 늘었다.

전남도 8만4819명(2018년)이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만2666명(2020년)으로 크게 늘어난 실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는 불안정한 직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일용직과 단기 일자리 노동자 등이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이 많아진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차상위계층의 위기도 기초생활수급자 못지 않고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락하는 등 빈곤층에 내몰리는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 위기가구 급등에 따른 사회 안전망 점검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시급하다는 게 복지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저생활에 위협을 받는 빈곤층은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더욱 두텁게 지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하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파산·폐업 도미노=A(52)씨는 지난해 9월 광주에서 18년간 운영하던 낙지전문음식점 문을 닫았다. 코로나 전만 해도 하루 평균 70~80만원 올렸던 매출이 코로나 이후 10만원대로 급락하더니,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을 버텨왔지만 건물주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이유로 임대료 70만원 인상을 통보한 게 결정적이었다. 남편이 직접 무안을 오가며 낙지를 가져다 날라도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A씨는 "가뜩이나 돈이 없어 죽겠는데, 건물주는 보증금 4000만원도 주지 않아 소송까지 해 일부를 받았다"면서 "아직도 1000만원을 못받아 소송중"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김씨는 "단골 손님들이 예약 전화를 할 때면 문 닫았다고 말하는 게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B(54)씨도 21년 동안 꾸준히 한 자리에서만 해온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지난해 11월 접었다.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모든 외식 업종에서 일반화되면서 배달 전문인 치킨·피자·족발집 등의 매출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게 원인이었다.

B씨는 "남편은 배달, 나는 주방에서 일하며 21년 6개월을 한 자리에서 버텼는데, 한 달 매출액이 200만원이 되지 않아 임대료와 고정비를 빼면 적자가 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흐느꼈다.

A씨와 B씨만 그런 게 아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지난 2020년 광주는 13%, 전남은 11.4%였다.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생계를 유지하다 문을 닫아 돈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법원을 찾는 파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7일 광주지법과 대법원 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지난해 2239건으로, 2020년 2041건에 견줘 크게 늘었다. 파산 신청 건수는 2018년 2032건에서 2019년 2086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2041건으로 줄어드는 것 같더니 지난해 증가폭이 커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원리금 유예 조치에도 불구, 개인 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무너지고 있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의 상환 유예조치가 만료되면 또다른 파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9일 앞으로 온 대통령 선거에도 이같은 점을 해결할 후보에 표를 주겠다는 말이 나오지만 구체적 해결책을 내놓은 후보를 찾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윤상현 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부장은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현행 규정상 지금 폐업을 하면 손실보상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폐업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지속되면 빚더미에 앉아 파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건조주의보 속 전남 동부권 잇단 산불

순천·광양·구례 등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동부권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2시 50분께 구례군 간전면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꺼졌다.

이날 불은 주민이 예초기로 풀을 베다 튄 불씨가 건조한 날씨 탓에 주변으로 번진 것으로, 임야 29ha를 태우고 21시간 만에야 진화됐다.

같은 날 오후 2시 10분께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한 야산에서 난 불로 1.2ha를 태우고 2시간여만에 꺼졌다. 같은 날 고흥군 두원면에서도 비슷한 시간대인 오후 2시 50분께 산불이 나 0.5ha를 태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순천·광양·여수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특히 전남 동부권의 경우 대기가 매우 건조해 바람이 강하게 불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실효습도가 35% 내외(순천시 35·광양 36·여수 37·구례 피아골 38·광주 조선대 41·고흥 도화 41·보성 벌교 42·흑산도 53)로, 실효습도는 수일 동안의 평균 습도를 합산해 건조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실효습도가 낮을수록 건조하다.

산림청은 지난 2달 간 전남에서 발생한 10건의 산불로 7.31ha의 임야가 불에 탄 걸로 집계하고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32건의 산불로 18.04ha의 임야가 사라진 점과 비교해 올 들어 산불 발생이 잦다는 게 산림청 분석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전남 동부권을 매우 건조한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며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취약시설 방역물품 지원 광주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주차장에서 지난 25일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과 노인복지과 직원들이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방지를 위해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 등 관내 취약시설에 보낼 마스크와 방역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야구 수업 안전조치 미흡해 유치원생 공 맞아 부상

잘못 반성하고 합의한 학교장·야구감독 선고유예

야구 수업을 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장과 야구부 감독에게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초등학교장 A(59)씨와 학교 야구부 감독 B(50)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 수업을 할 때 사고를 방지할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인접한 놀이터·차량 진입로 등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측 과실로 당시 놀이터에 있던 유치원생(여·5)이 훈련 중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당시 야구 훈련장 외야 쪽에는 이동식 펜스(높이 1.5m) 외에 안전망이 없었고 3루쪽 외야의 경우 별다른 안전장치도 갖춰지지 않았다. 애초 이들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졌지만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등의 과실로 5살된 유치원생이 머리에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어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해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등 전수조사

학대 사례 3건 발견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만 3세 아동 중 소재가 불분명하고 안전이 의심되는 2만6000여 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3건의 학대 사례를 발견하고 보호 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2017년생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도 받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아동이 가정 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본인 의사를 적정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이를 '만 3세'로 본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2만6251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8% 이상(2만5851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총 4명이었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경찰이 조사한 결과 2명은 방임, 1명은 정서학대 피해 아동으로 판정됐다. 1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다. 관계 당국은 학대로 판정된 아동들의 보호 계획을 수립했다. 부모와 상담한 뒤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 회의 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계획에 따라 원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과 상담,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 383명(1.5%)에게는 양육환경 개선과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복지급여, 생필품,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한편, 보호자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 13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전원 안전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0~12월에는 2018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1타경 4731	1	광양시 구마9길11, 102동 1층 101호 [중동,중마2주공아파트] 49.77㎡	아파트	50,000,000 / 50,000,000	
2021타경 4793	1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11, 104동 2층 206호 [대림아파트] 60.0㎡	아파트	89,000,000 / 89,000,000	
2021타경 5192	1	순천시 안산길5, 105동 6층 605호 [연향동,연향동호반리젠시빌] 36.0660㎡	아파트	87,000,000 / 87,000,000	
2021타경 55197	1	순천시 북정3길28,102동4층401호 44.04㎡	아파트	83,000,000 / 83,000,000	
2021타경 55555	1	광양시 진등길55-5, 502동 23층 2303호[마동,광양송보파인빌5차아파트] 84.9766㎡	아파트	247,000,000 / 247,000,000	
	2	광양시 진등길55-5, 502동 14층 1401호[마동,광양송보파인빌5차아파트] 84.9766㎡	아파트	243,000,000 / 243,000,000	
	3	광양시 진등길55-5, 501동 2층 202호 [마동,광양송보파인빌5차아파트] 84.9476㎡	아파트	240,000,000 / 240,000,000	
2021타경 55890	1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46-7, 303동 14층 1401호 [돌산청솔3단지아파트] 59.85㎡	아파트	97,000,000 / 97,000,000	
[기타]					
2021타경 5154	1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219 496.0㎡	대	93,099,580 / 93,099,580	일괄매각
		고흥군 과역면 원당길 102-106 [제1동] 단층 어업용창고 90.34㎡	창고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 5093	1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303 187㎡	전	11,968,000 / 11,96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경계측량요
2021타경 5420	1	순천시 상사면 초곡리 44-5 972㎡	전	30,132,000 / 30,13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1타경 54590	1	여수시 여천동 912-14 1045㎡[공유자임성정지분1/2]	답	472,891,500 / 472,891,50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농지취득자격증명요.경계측량요
		동소912-12 2126㎡[공유자임성정지분1/2]	답		
		동소912-11 1398㎡[공유자임성정지분1/2]	답		
2021타경 55845	1	보성군 조성면 봉능리 754 1445㎡	전	23,120,000 / 23,1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1타경 54835	1	여수시 국동12길 37 단층 66.12㎡ 제시외 단층 창고 등 44.8㎡	단독주택	111,893,400 / 111,893,4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여수시 국동 193-242 155㎡	대		
2021타경 54897	1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648-2 1365㎡	전	42,457,360 / 42,457,36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수목및정원석포함,지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여수시 돌산읍 도실길 20-14 단층 84.76㎡ 부속건물 단층 축사및창고 21.06㎡ 제시외 단층차양등3.69㎡[물건번호1:공유자조세정지분1/4.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단독주택		
2021타경 55944	1	순천시 금옥1길 22 단층 21.16㎡	단독주택	18,660,000 / 18,660,000	일괄매각.경계측량요
		순천시 금곡동 227-2 30㎡	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22. 3. 14.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2. 3. 21.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신영민